〈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J프로젝트〉

공장용지 숨통 트이고 솔라시도 탄력 받는다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광주 첨단산단 산업·주거·상업·업무 등 산학연 연계모델로 개발

전남 해양자원 요트마린 실크로드 등 테마별 섬 개발 프로젝트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틀이 마련됐다. 12일 지역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내재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장기 프로젝트를, 기초자치단체는 2개 이상으로 권역을 구성한 뒤 주민 체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프로젝트 선정, 권역 구성 및 사업 제안 등에 있어서 대부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구분된다.

정부대책 중 광주·전남과 밀접한 또 다른 분야는 광주에 도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남의 대불산단을 리모델링해 기업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부족한 공장용지 숨통 트이나=이날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중 하나는 첨단산단 확대 조성과 규제 완화다. 정부는 올해 광주 등 3개 지역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에 들어설 도시첨단산단 예정지는 광주(첨단지구)·전남(장성군)에 걸쳐 조성되는 첨단 3지구(2017년 12월 완공 예정·면적 382만3000㎡) 중 일부 지역으로 37만2000㎡규모다. 도시첨단산단은 산업시설 외에도 주거·상업기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 시설 등이 함께하는 산학연 연계모델로 개발된다.

정부는 또 지역개발 지원 정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광주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4.5㎢로, 190여개에 이르는 농촌형 마을이 대부분이다. 광주시는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우선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평동산단 3차 예정부지 174만5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오는 2016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에는 본촌산단 등 8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대불 국가산단 등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산업단지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일부 용지에 대해서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인프라 구축 1815억원 필요=광주시가 정부에 건의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크게 3D콘텐츠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문화전당 주변 문화예술마을 등 조성, 향약 문화관 건립 등이다.

시는 우선 광주시 남구 송암 산업단지 일대 5만2139㎡ 부지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175억원을 투입해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작 강화 기반조성을 위해 3D·CG제작과 관련 장비가 구축된 창조콘텐츠 제작 지원센터(480억원)와 전시·홍보, 제작품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할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460억원)도 건립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또 3D창조콘텐츠 체험사업으로 235억원을 들여 디지털 체험 테마파크와 영화 야외촬영 스튜디오, 실외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오는 2015~2023년까지 문화전당 인근 15만㎡부지에 538억원을 투입, 공·폐가를 활용한 문화예술마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등을 조성하는 한편 102억원을 들여 호남의 공동체 정신문화인 향약 문화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다만, 각 사업별로 50% 안팎의 순수 지방비(시 예산)가 필요해 정부의 사업지원안이 확정되더라도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남해안 해양관광육성예산 확보가 관건=전남의 최대 장점은 섬, 해안선, 갯벌, 바다 등 해양자원이다. 이를 통한 해양관광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 기반시설 미흡, 민간자본의 참여 부진 속에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전남도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며, 그동안 밀려 있던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문제는 정부의 예산지원 및 제도 개선이 될 전망이다.

도가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솔라시도' 기업도시개발이다. 오는 2025년까지 2조2091억원을 들여 서남해안에 일본과 중화권 수요를 겨냥한 세계 수준의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시개발 면적만 33.9㎢에 달하며, 사업비의 대부분인 1조8760억원을 민간 투자에 의존, 대규모 투자자가 나타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음으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다. 오는 2022년까지 1조8981억원의 예산으로, 10.72㎢의 4개 지구 8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7916억원), 사파리아일랜드 등 테마별 섬개발 프로젝트(1조2100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1조1809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사업(1조71억원) 등 오는 2026년까지 총 22개 사업에 9조2561억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에 ▲공유수면 총사업비 정산제도 개선 ▲기업도시 진입도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선 ▲관광시설 개발예정부지 공유재산 취득 제도 개선 ▲공기업 선진화 방침 완화 등을 건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고 한 만큼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예산은 물론 제도의 개선까지 이뤄져야 이들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거야?

'게릴라 걸스' 포스터 〈이미지 제공=출판사 '마음산책'〉

김은영의 '그림 생각'

(65)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가?"

70년대 초반부터 여성 미술인들은 남성 중심적 문화로 인하여 여성이 미술의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당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80년대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 그룹은 익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게릴라 걸스(Guerilla Girls)'로, 이들은 고릴라 가면을 뒤집어쓰고 하는 퍼포먼스, 강의, 출판,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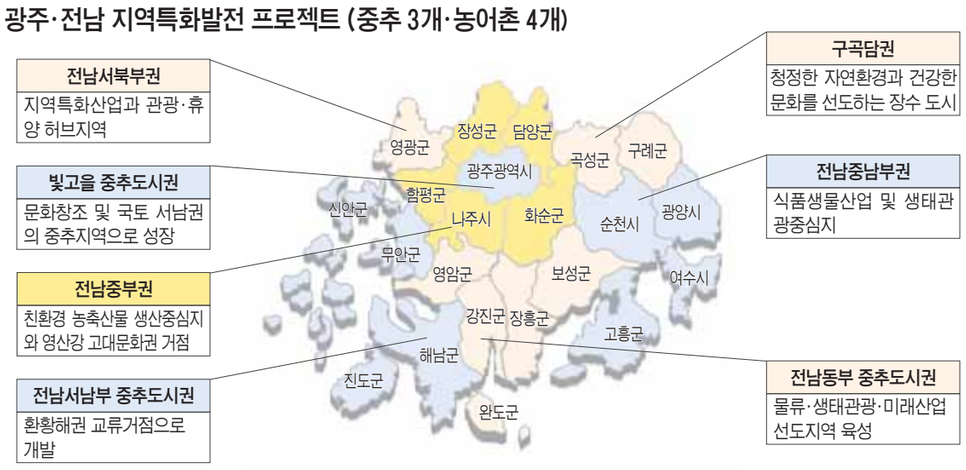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이미지가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앵그르의 작품을 패러디한 것으로 '그랑드 오달리스크'의 몸에 성난 고릴라 탈을 붙인 포스터(1989년 작)이다. 미국 최대의 미술관이라 불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전시하고 있는 근대미술 작품 중 여성 미술가의 작품은 5% 이하인 반면, 누드 작품의 85%는 여성인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미술의 역사를 연구해 온 미술사학자 휘트니 채드익(Whitney Chadwick)은 저서 '여성, 미술, 사회'에서 "옛 거장과 걸작을 통해 규명되는 미술사의 흐름에서 여성이 생산자라기보다 시각적 볼거리인 재현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음"에 주목해 '게릴라 걸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000여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에서 선거권과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백여 년 전 선배 여성들 덕분으로 여성들의 권리는 향상되어 왔지만 완전한 양성 평등을 이루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970년대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이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존재하지 않는가?"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광주·전남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중추 3개·농어촌 4개)



■광주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KTX 개통 등과 연계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조성

지자체 자체산업	· 광주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 광주폴리 프로젝트
중앙정부 지원요구	· 3D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전남도 서남해안 해안관광 육성

· 섬, 해안선, 갯벌 등 전남의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 휴양·관광·레저 산업이 복합된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

지자체 자체산업	· 해양관광 숙박시설 투자유치 · 해양관광 축제
중앙정부 지원요구	· 솔라시도 기업도시개발 사업 지원 · 요트마린 실크로드

■광주·전남 7개 행복생활권 뭘 담았나

빛고을권

대중교통 환승 할인·장의 시설 조성·통합 컨벤션뷰로 연계

전남 서남부권

목포시 도시재생·갯벌생태 프로그램 개발

전남 동부권

여자만 갯노을 생태탐방로 조성·임진왜란 호국 교육벨트

박근혜 정부는 기존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더 세밀하게 나눴다.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 종류별로 모두 56곳의 지역행복생활권을 둔 것이다.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곳,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14곳 등 20곳이 중추도시권에 해당된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을 묶는 '빛고을 중추도시권',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의 '전남 서남부 중추도시권',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의 '전남 동부 중추도시권' 등이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해 '빛고을권'의 광주·전남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대중교통 환승 할인 지원사업, 장의 시설 조성 및 요금 조정, 통합 컨벤션뷰로(지역산업과 관광자원 연계·활용한 광역서비스) 연계사업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도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5642억원이 투입되는 총 59개의 사업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광주시는 연계협력사업으로 현 광주 시티투어버스를 행복생활권내 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구 노대동~화순 도곡~나주, 광주~장성 등을 연결하는 광역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복생활권내 자치단체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버스정보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기반 확충 사업으로 영락공원과 망월묘지내에 공동 장의시설을 조성하고, 장사시설 이용료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 도농 상생 연계사업, 광주~나주 마한문화관 관광코스 설계, 광주 향교~담양 가사문학관~장성 필암서원을 잇는 선비 문화체험, 무등산 국립공원 문화관광 공동 추진, 화순 기정떡·담양 떡갈비·나주 삼합 등 차세대 식품산업 공동 육성, 광주~나주 화훼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또 서남부권 행복생활권에서는 목포시 도시재생, 갯벌생태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동부권에서는 여자만 갯노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임진왜란 호국 교육벨트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빛고을권은 문화 창조 및 국토 서남권의 중추지역, 서남부권과 동부권은 각각 환황해권 교류거점,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외에 농어촌권으로는 나주·화순, 담양·곡성·구례, 장성·영광·함평, 영광·장흥·강진·완도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완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